

임금 삭감·노동강도 강화·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 정당하다

6월 14일에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 압박을 키우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기는 박근혜와 사용자들이 한목소리로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더 심화될 경제 위기 속에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줄이기 위해 적자가 큰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단됐던 가스·전력 민영화도 재추진하려 한다.

박근혜는 전체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기구의 수장이자 공공부문의 사용자로 노동자 공격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공격 저지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60여 개 공공기관이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제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조나 과반 이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는 완전히 무시됐다.

정부는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강변해 왔지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박근혜는 이런 불법 추진을 두고는 공공기관장들이 "개혁의 물꼬"를 터준 것이라고 칭찬하고 노조들이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다. 박근혜를 포함해 역대 정부들은 공공기관들의 부채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생긴 적자의 책임을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



다. 투자와 사업 추진에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부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

기득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8년 이래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쳐 실질임금 인상이 사실상 제자리 수

준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기업 부실을 해소한다며 기업 복지를 대폭 삭감하고 장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크게 깎는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였다. 반면 정부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앞장선 공공기관장들은 지난해에만 연봉이 18퍼센트 인상돼 2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챙겨 갔다. 도대체 누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정부의 총인건비·총정원 통제로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를 강요 받았다. 철도에서 인력 부족으로 위험한 조건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정규직 노동자만 여러 명이다. 또 지하철에서 1인 승무제로 인해 자살한 기관사만 아홉 명에 이른다.

기존 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자, 정부는 외주화를 늘려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최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노

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계속 강화하고 쥐어짜면서 동시에 열악한 비정규직을 대거 늘려 왔다. 이런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청년 실업 해소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내려 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역겹기 짝이 없다.

정부의 거짓말과 달리,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진정한 격차는 1퍼센트에 불과한 최고소득자들과 나머지 대다수 노동자들 사이에 벌어져 온 것이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배를 불러 온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조건이 공격받을 때,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층이 함께 늘어 왔다.

박근혜가 공공 '개혁'이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막아야 다른 부문에 대한 공격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공격에 반대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다.

새로 나왔습니다

임금, 임금격차, 연대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136쪽 | 4,000원

다들 우리 투쟁을 '철밥통' 투쟁이라고 욕한다. 반박하고 싶는데 어떻게 할 지 몰라 답답했는데, 우리 투쟁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소책자가 나와서 반기웠다.

- 한 철도 노동자

불법 이사회 무효! 그 힘은 투쟁 확대에 달려 있다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가 '불이익'하지 않다는 정부의 말은 완전한 사기다.

성과연봉제는 개인 성과를 임금과 승진에 연계시켜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임금 하락을 압박하고 노동강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런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는 당연히 공공서비스의 질 후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질 수 있고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위험도 크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기층 노동자들 사이에 분노가 커져 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5월 말부터 6월 15일까지의 비상총회에 전국에서 1만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6월 9일 건강보험공단노조의 정의행위 찬반 투표는 88.5퍼센트 참가율에 87.8퍼센트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금융 노동자들의 분노도 매우 커지고 있다.

오늘 열린 대규모 집회는 노동자들의 이런 분노를 잘 보여 준다. 이 집회는 박근혜가 강력한 공공 '개혁' 추진을 촉구한 직후에 열린 만큼, 중요한 정치적 항의 행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를 발판 삼아 투쟁을 계속 확대해 가야 한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이사회 통과를 강행했다고 해서, 법률적 수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정부는 올해 초 행정지침 발표로 이런 논란을 대비해 왔던 터라 판결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안심만 할 수도 없다.

국회에서의 쟁점화도 노동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투쟁을 벌이냐에 달려 있다.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일관된 반대 입장이 아니라 불법적 도입만을 문제 삼고 있다. 더민주당 등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 조합원들이 동참하는 투쟁을 강화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층의 분노

5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데도 공공부문 노조 지도부들이 (불법 추진을 규탄은 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과 대응을 조직하지 않은 점은 무척 아쉽다. 총선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기도 괜찮았던 만큼, 만약 지도부가 투쟁 계획을 내놓고 호소했다면 조합원들은 이에 호응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노동자들

의 분노와 투지가 살아 있으니 성과연봉제 적용을 저지하고 백지화하기 위해 기층에서 투쟁을 확대해 가야 한다. 그 속에서 사측이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개인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청년을 이간질해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하향평준화를 하려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격을 막고 자신들의 조건을 지켜 내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주어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할 수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은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투쟁을 고무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도 사용한다면,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물론 이

는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므로, 활동가들이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경고 파업과 금융노조도 함께 돌입하는 9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건강보험공단노조 같은 대형 노조들이 투쟁의 축을 형성하며 투쟁 기세가 가장 좋을 때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근혜의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맑시즘2016

7월 21일(목)~24일(일)
장소: 서울 주최: 노동자연대

16년째 열리는 맑시즘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은
마르크스주의 포럼입니다

www.marxism.or.kr

공공부문 구조조정·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데 이어 에너지·환경·교육 부문의 '기능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5개 공공기관을 통합 폐합하고 2개 기관을 사실상 폐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9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발전·가스 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발전 자회사의 지분을 부분 매각하는 등 민영화 계획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지출 삭감으로 부채를 줄여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연금 개악, 철도·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추진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능조정' 방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 노동자들 중 최소한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비롯해 무려 3천 5백 명이 해고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될 것이다. 한국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고 석유공사, 가스공사에서도 자원개발 부문을 축소한다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때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한 '자원개발'에 수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던 정부가 이제 와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며 해당 부문 노동자들을 내쫓겠다는 것이다.

발전 자회사의 지분 매각, 전기·가스 판매 민간 개방 등 발전·가스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민영화는 기업주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던 정부 재정을 축소

하는 조처다. 이는 단지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거듭 지적돼 온 것처럼 민영화는 공공요금 인상,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고집스럽게 민영화가 아니라 고집스럽게 공공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무늬만 '공공'으로 남겨둔 채 민영화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형식상 정부 소유로 남아 있는 부분도 시장 논리에 따르게 된다. 민간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요금 인상뿐 아니라 '비용 절감'에도 혈안이 될 것이다. 심지어 화력 발전 정비, 핵발전소 설계, 국립공원 시설 관리 등도 민간에 넘기겠다는데 이는 또 다른 구의역 참사, 또다른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spaper.org>